

양재·개포 ‘ICT진흥지구’ 지정 성수 ‘문화콘텐츠’ 권장업종 추가

서울시 1차 도시계획위원회

진흥지구 제도 기반 전략산업 재편
AI·로봇·바이오 등 생태계 확장
市 “자치구 특화산업 적극 지원”

서울시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를 기반으로 전략산업 재편에 나선다.

시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신규 지정하고, 성수 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을 권장업종에 추가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는 지역별로 집적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7년 도입한 제도다. 정부의 특구 제도 및 수도권 규제와 무관하게 시가 직접 전략산업을 지정해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 고유의 산업정책 플랫폼

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번 의결로 서울의 지역별 산업구조를 재정비하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산업클러스터 구조가 한층 체계적으로 재편될 예정이다.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양재AI미래융합혁신특구의 배후지역인 양재 ICT 진흥지구와 과거 ‘포이밸리’로 2000년대 벤처붐을 주도하던 개포 ICT 진흥지구에서 공동입안해 진흥지구로 지정된 최초 사례이다.

성수 IT·문화콘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독점·성수역 일대에 디자인·미디어·패션 기업들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IT산업뿐 아니라 문화콘텐츠 산업을 결합해 지역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8년간 진흥지구 제도는 도시제조업 보호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돼 왔다. 시 관계자는 “이제 산업구조가 AI, 바이오, 로봇, 핀테크 등 첨단산업 위주로 변화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제도적·정책

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는 용산 AI·ICT, 수서 로봇 특정개발진흥지구대상지를 선정했고, 관악 R&D벤처창업 특정개발진흥계획 수립을 승인해 올해부터 서남권 최초로 진흥지구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추진해 왔던 진흥지구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6개 진흥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 중이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연구를 의뢰함과 동시에 제도개편 방향을 상반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는 서울시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유망산업을 집중육성해 강남·북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라며 “각 자치구의 특화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서울시 산업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 강서구 ‘에코스쿨’ 조감도

서울시교육청, 강서구 ‘에코스쿨’ 첫 삽

227억 투입… 12월 개관 목표

서울시교육청은 강서구 공진중학교 폐교 부지에 조성 중인 가정 ‘에코스쿨(생태환경교육파크)’이 착공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폐교 부지를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교육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이번 사업은 2023년 10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의 공동투자 심사, 2024년 4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통과해 사업 추진 기반이 확보됐다.

현재 구조 공사와 주요 공간 조성을 중심으로 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며 올해 12월 개관을 목표로 한다. 에코스쿨은 연면적 6783㎡,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며 총 227억원의 시설 사업비가 투입된다.

에코스쿨 완공 후 학교 교육과 연계한 11개 주제, 약 40여 개의 생태·환경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학생들과 시민들은 에코스쿨에서 기후 위기, 생물다양성, 에너지, 먹거리 문제를 통합적으로 배우고 체험하게 된다.

1층에서는 놀이기 발전기 등 적정 기술을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는 실습형 교육이 이루어지고, 2층에서는 에코아트 등 유아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와 예술을 결합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3층에는 토종 작물 및 먹거리 교육이, 4층에서는 탄소 중립 실천 중심 교육이 운영될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공진중에 조성되는 에코스쿨은 기후위기와 생태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배움과 실천으로 풀어내는 서울의 핵심 공간이 될 것”이라며 “학생은 물론 시민과 지역이 함께 참여해 변화를 만들어 가는 생태·환경교육의 거점 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교육부 “교권침해 행위, 교육감이 직접 고발”

폭행·성희롱 등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교사 개인을 통한 민원접수 금지

폭행, 성희롱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육감이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피해 교원과 학생의 분리조치를 내실화하기 위해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결정 전에도 학교장이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을 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2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폭행, 성희롱, 불법정보 유통 등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교보위에서 심의해 관찰청(교육감)이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고발 절차·방법 등을 담은 매뉴얼이 생긴다.

또한, 악성 민원인에 대한 학교장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침해행위의 중지 및 경고, 퇴거 요청, 출입 제한 등 학교장의 처분 권한과 조치 사항도 명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2일 대전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를 찾아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한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교원과 학생의 분리조치를 내실화하기 위해, 상해·폭행이나 성폭력 범죄 관련 사안은 교보위 결정 전에도 학교장이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을 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현재는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지 않으면 불참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여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추진한다.

상해·폭행,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중대 피해를 입은 교원이 마음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휴가 일수를 조정할 예정이다. 해당 교원에게는 현재의 특별휴가 5일에 5일 이하의 추가 휴가를 부여하도록 추진한다.

다만 이번 방안에서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토대로 논의됐던 교권침해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방안은 제외됐다.

교사 개인 대신 기관이 대응하는 민원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민원처리 세부 매뉴얼을 마련해 안내한다. 학교에서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민원대응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민원대응팀의 법제화를 국회에서 논의한다.

학교 단위 민원접수 창구를 학교 대표번호와 온라인 학부모소통 시스템 ‘이어드림’ 등 학교가 미리 정한 창구로 단일화하고, 교사 개인 연락처나 SNS를 통한 민원 접수는 금지한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 ‘쉬엄쉬엄 모닝 런’ 시범 운영

도심 차로 일부 운동공간 활용

서울시가 도심 차로 일부를 시민들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내어주는 ‘쉬엄쉬엄 모닝 런(가칭)’ 시범 도입한다.

시는 오는 3월부터 주말 이른 아침, 도심 속 시민 운동 공간을 제공하는 ‘쉬엄쉬엄 모닝 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오세훈 서울시장의 쿠알라룸푸르 ‘카프리모닝(Car-Free Morning)’ 현장을 방문해 얻은 아이디어를 서울 실정에 맞게 설계한 행사다.

기록·경쟁 중심의 대규모 마라톤 대회가 아니라 자전거, 킥보드, 러닝, 걷기 등 원하는 운동을 자신만의 호흡과 방식으로 즐기는 생활형 운동 프로그램이다.

기존 마라톤 대회와 달리 교통 불편을 주지 않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차량 통행이 적은 주말 아침 시간대에 도로 전면 통제가 아닌 ‘일부 차로’만을 활용, 차량 교행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시민 교통 불편을 최소화한다.

앞서 시는 마라톤 대회 가이드라인에 ▲대회 개최시기 제한 ▲출발시간 조정(오전 7시30분 이전) ▲장소별 적정 참가인원 ▲소음 65dB 이하 ▲도로 위 쓰레기 신속 처리 등을 명시했다.

시는 모두가 만족하는 행사 운영,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교통·체육·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교통 영향, 안전 관리,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범 운영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진 기자

하남시, ‘누구나 돌봄’ 사업 본격 추진

5개 기관 업무협약… 내달부터 서비스

하남시는 ‘2026년 누구나 돌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5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 ‘누구나 돌봄’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생활돌봄 및 동행돌봄 분야 3개 기관, 식사 지원 서비스 1개 기관, 주거지원 서비스 1개 기관 등 총 5개 기관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해당 기관들은 오는 2월

부터 돌봄이 필요한 모든 하남시민을 대상으로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6년 누구나 돌봄’ 사업은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기존 돌봄 체계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 규모는 1인당 연 최대 150만 원 상당의 서비스로,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는 전액 지원되며, 120% 초과 150% 이하 가구는 서비스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남(경기)=유진채 기자 yujin@

교육부, 교육정책 자문위원회 출범

AI 미래교육 등 4개 분과 구성·활동

교육 정책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할 정책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

교육부는 22일 코리아나 호텔에서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2027년 1월 21일까지 향후 1년간 국정과제 내용과 연계

한 ▲국가책임 교육·돌봄 ▲학교공동체 회복 ▲인공지능(AI) 미래교육 ▲지역 교육 혁신의 총 4개 분과로 구성해 활동한다.

또 정책자문위원회가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장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조직해 분과별 추진 상황 공유 및 심층 논의, 의제 발굴 등을 해나갈 예정이다.

위원으로는 학계·연구원·교육현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48명이 위촉됐다. 전체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장(교육분야 총괄)을 역임한 홍창남 부산대 교수가 맡는다.

교육부는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교육 현장과 활발히 소통하고, 새롭게 제기되는 교육 쟁점들에 유연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논의 주제를 계속 발굴하고, 필요시 새로운 분과를 개설하거나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